

#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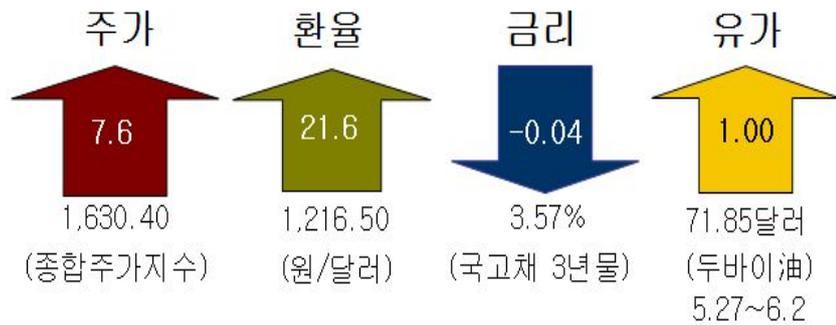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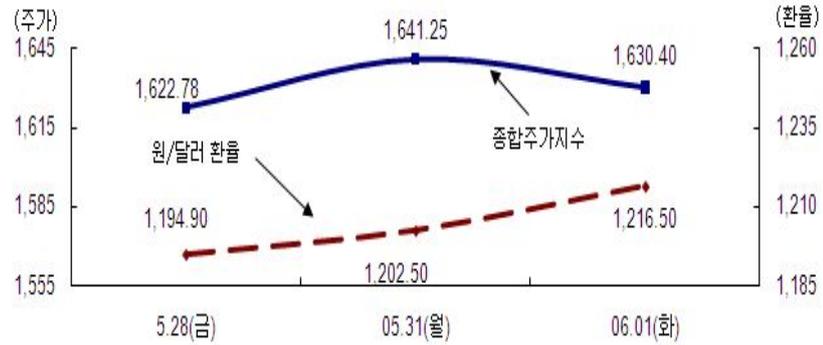
10-22(통권 402호)  
2010.06.03



■ 금융통화위원회 60년, 변화와 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8~6.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금융통화위원회 60년, 변화와 과제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2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김 동 열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Executive Summary

### □ 금융통화위원회 60년, 변화와 과제

#### ■ 금융통화위원회의 발전 과정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기구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5인의 추천위원 등 **모두 7인의 상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950년 6월 출범한 최초의 금통위는 '금융 산업 경제의 각계 대표로 구성'됨으로써 衆議制를 구현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62년 추진된 제1차 한은법 개정으로 외환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되고, 재무부장관에게 금통위 결정에 대한 再議요구권이 부여되는 등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었다. '97년 말 제6차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장을 맡고, 위원 전원이 상근하며, 행정부 관련 금통위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중립성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

#### ■ 금통위 60년, 변화와 성과

**(정책의 변화와 성과)** 1957년부터 재정안정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은 1979년 M2(총통화)를 중심통화지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가 도입된 이후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통화량목표제가 물가안정목표제로 전환**되었고,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서 '물가안정'으로 축소되었다. 2000년부터는 향후 3년의 중기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1979년부터 운용된 통화량목표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으며, '99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제의 도입으로 통화정책의 성과는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2000년대 초반 저금리의 장기화로 경기 및 금융시장의 조절 기능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人的구성의 변화와 성과)** 인적 구성의 변화를 보면 출범 초기인 '50년부터 '62년까지는 금융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기업인들도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 이후에는 대학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다시 금융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등 **금통위원의 전문성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 단체에 배정된 추천권이 대학교수에게 행사되고 민간 금융인의 추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금통위의 대표성은 다소 미흡한** 형편이다.

제6차 한은법 개정 이후 금통위원의 **평균 재임기간은 36.6개월로** 以前의 27.2개월에 비해 **크게 길어졌고**, 임기만료 후 퇴임의 비율도 '98년 이전 43%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우 각각 65%, 89%로 높아져 금통위 운영의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

#### ■ 향후 60년을 위한 과제

금통위의 향후 60년을 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목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통위원 임명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는 '2단계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금통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짝수 해 또는 홀수 해에 한명씩 교체하는 임기 교차배열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모든 금통위원이 교체되는 현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금통위원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인과 민간 금융인의 추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금융통화위원회 60년, 변화와 과제 >

금융통화위원회의 발전 과정	
<b>역할/구성/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정책 수립과 韓銀 관련 주요사항 결정 ('50년 6월 창립, 60주년)</li> <li>- 한은 총재(의장)와 부총재, 5개 기관 추천 위원 5명 등 총 7인 위원</li> <li>- 임기 4년(부총재는 3년)에 연임 가능. 의사록 공개로 투명성 강화</li> </ul>
<b>제도 변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년 5월 제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부장관에게 再議요구권 부여. 외환업무를 재무부로 이관</li> </ul> </li> <li>- '97년 말 제6차 개정: 중립성 제고의 전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재무부장관 → 한국은행 총재</li> <li>· 임기: 3년(9명) → 4년(7명), 근무: 비상근 → 상근(full-time)</li> <li>· 업무범위 축소: 은행감독 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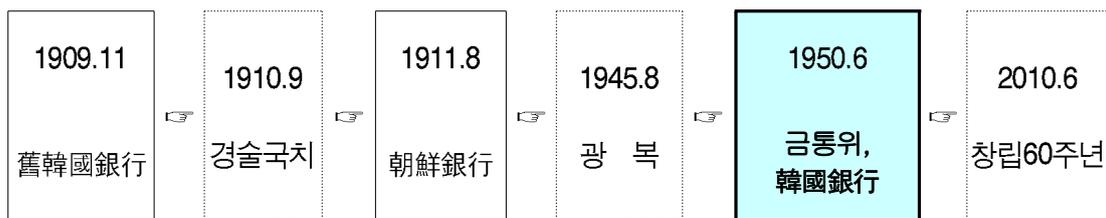
금통위 60년, 변화와 성과	
<b>정책의 변화와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7년 재정안정계획 수립, '79년 통화량목표제 도입</li> <li>- '99년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콜금리를 설정</li> <li>· M3 목표증가율은 감시지표로만 활용</li> </ul> </li> <li>- '물가안정 목표제'는 안착했으나, 경기조절 역할은 다소 미흡</li> </ul>
<b>人的구성의 변화와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통위원의 전문성 개선: 대학교수와 금융인 중심</li> <li>-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표성 취약: 기업인과 민간 금융인 추천 급감</li> <li>- 재임기간 길어짐: 평균 27개월에서 평균 37개월로 ('98년 前後)</li> <li>- 임기만료율 높아짐: 50%내외에서 89%로 ('98년 前後)</li> </ul>

향후 60년을 위한 과제	
<b>향후 60년을 위한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정책 목표의 탄력적 운용과 정책의 중립성 제고</li> <li>- 2단계 임명 시스템 도입: '대통령 임명'에서 '대통령 임명-국회 동의'로</li> <li>- 임기 연장: 중립성 제고를 위해 임기 연장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게)</li> <li>- 교차 배열: '짝수 해 3명 교체'에서 '짝수 해 1명 교체'로</li> <li>- 민간 전문가 추천: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민간 기업인과 금융인 추천</li> </ul>

## 1. 금융통화위원회의 발전 과정

- (60주년) 2010년 6월 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금통위 관련 제도, 통화정책, 인적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함
- (설립 배경) 일반금융기관과 경쟁 관계에서 상업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던 '조선은행'이 광복 이후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신용팽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할 강력한 중앙은행 설립이 요구됨
  - 금융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확보하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이 필요<sup>1)</sup>

<표 1> 금통위·한국은행의 설립 배경과 60주년



- (역할/구성) 현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7인의 상근 위원으로 구성됨
- 한국은행 총재(금통위 의장) 및 부총재, 그리고 금융, 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로서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는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나머지 5인의 위원은 각 추천기관<sup>2)</sup>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의 임기는 4년(부총재는 3년)이며, 전원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
  - 통화신용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결정내용은 회의 종료 후 즉시, 의사록은 6주 후에 공개하고 있음

1) 1949년 9월 정부 요청으로 파견된 美FRB 금융전문가 2명의 도움을 받아 마련된 한국은행법은 1950년4월21일 국회를 통과, 5월5일 공포되었으며, 6월5일 금통위가 설립되고, 6월12일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함.

2) 현재 금통위원 5인의 추천기관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연합회.

○ (이상적 출범) 최초 금통위는 “金融 産業 經濟의 各界 代表로 구성”됨으로써 衆議制를 구현하고 “한국금융체계의 民主的 改編<sup>3)</sup>”을 상징했으며, “政治的 中立性과 技術的 專門性, 機動的 自治性”이라는 운영 원칙을 천명

- 아래 <표 1>과 같이, 1950년 6월 5일 구성된 최초의 금통위는 금융(3인), 산업(2인), 경제(2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록 재무부 장관이 금통위원장을 겸했지만, 위원 추천권을 ‘관료 2, 민간 3’으로 분할하여 전체 持分은 ‘관료3, 민간3, 중앙은행1’이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응
- 최초의 금통위에는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민간 금융기관 대표 2인, 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은 기업대표 1인이 참여하여, 衆議制를 구현하려 시도함
- 금융기관 추천 위원 2인의 임기만 1년이었고, 나머지 5인의 임기는 4년

<표 1> 한국은행법 제·개정과 관련 제도의 변화

	한국은행법 制定 (1950년5월5일)	제1차 개정 (1962년5월24일)	제6차 개정 (1997년12월31일)	제7차 개정 (2003년8월12일)
명칭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 <b>운영</b> 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재무부장관 =금통위원장	재무부장관 =금통위원장	<b>한국은행 총재</b> =금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원장
위원회 운영	위원 7인, 비상근, 임기4년 (금융기관 위원, 1년)	위원 9인, 비상근, 임기3년	위원 7인, 상근, 임기4년	위원 7인, 상근, 임기4년 (한은 부총재, 3년)
위원 추천 기관	재무부장관(당연직)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금융기관추천(2인, 1년) 상공회의소(1인, 4년) 농림부(1인, 4년) 기획처경제위(1인, 4년)	재무부장관(당연직)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금융기관 추천(2인) 상공부 추천(2인) 농림부 추천(2인) 경제기획원 추천(1인)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한국은행 추천(1인) 재경원 추천(1인) 금감위 추천(1인) 대한상의 추천(1인) 은행연합회 추천(1인) <b>증권업협회 추천(1인)</b>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b>한은 부총재(당연직)</b> 한국은행 추천(1인) 재경부 추천(1인) 금감위 추천(1인) 대한상의 추천(1인) 은행연합회 추천(1인)
특징	금융(3인), 산업(2인), 경제 (2인)의 각계 대표(7인)로 구성. 3가지 운영원칙 (정치적 中立, 專門性, 自治性) 천명.	<b>외환업무를 재무부로 이관.</b> 재무부장관에게 <b>금통위 결정에 대한 再議요구권</b> 부여.	재경부장관은 추천권만 행사. <b>은행감독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b>	전체 7인 위원 중 韓銀 관련자 3인. <b>독립적 예산편성권 확보.</b>

3) 한국은행 구용서(具鎔書) 초대 총재의 “韓國銀行 創業에 際하여”(1950년6월12일) 중 일부.

○ (36년의 정체기) '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과 금통위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되고, 역할도 대폭 축소됨

-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금융 측면에서 원활히 뒷받침한다'는 명분 아래 1962년 5월 24일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금융의 민주화와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후퇴<sup>4)</sup>
- 명칭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격하, 임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외환관리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 재무부장관에게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再議요구권 부여, 금통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각의'에서 최종 결정
- 민간업계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상의 추천권을 없애고 상공부장관의 추천권을 신설했으며, 관료-민간-중앙은행의 대표성은 3:3:1에서 6:2:1로 변경되는 등 '官'주도적 금통위가 '97년 말까지 36년간 지속

○ (중립성 제고) '97년 말 외환위기라는 격랑 속에서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중앙은행과 금통위의 역할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

- 명칭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다시 환원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하게 되었으며, 7인의 위원이 상근
- 위원 전원이 상근하고 임기도 4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고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었으며, 의사록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형식적 의안 통과가 어려워짐
- 금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설계, 상근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1997년 말의 제6차 한은법 개정이 커다란 제도적 전환점 역할을 담당
- 2003년 8월 '증권업협회' 추천권이 없어지고, 대신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표성이 더욱 강화
- 중앙은행 관련 위원, 정부 추천 위원, 민간 추천 위원의 비율이 3:2:2로서 형식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설계<sup>5)</sup>

4) 한국은행(2000), [한국은행50년사], p.34.

5) 정부 측에서 은행연합회 추천과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위원 비율이 3:4로서 여전히 정부 측이 우세하다는 평가도 있음.

## 2. 금통위 60년, 변화와 성과

### 2-1. 정책의 변화와 성과

○ 국내 통화정책은 1957년 「재정안정계획(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이 수립되면서부터 체계적인 틀 아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함

- '48년 정부수립 후 사회경제 질서의 격변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연간 또는 분기별로 통화(M1)<sup>6)</sup>의 공급한도를 정함
- 재정, 비료(정부대행기관)<sup>7)</sup>, 민간, 해외, 기타부문 등 각 공급원천별로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통화를 공급
- '61년 5.16 군사정부의 수립으로 1961~62년 계획 수립이 중단되었다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경제안정이 위협을 받자 1963년 부활

- 국제수지 적자보전을 위한 대기성차관(Stand-by Credit) 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의 하나로 1965년부터 통화지표의 구체적 목표치를 IMF와 협의하여 결정
- 종전의 M1에서 중앙은행 純국내자산('66~'69년 상반기), 본원통화('69년 하반기), 금융기관의 국내신용('70~'82년), 순국내신용('83~'86년) 등으로 변경<sup>8)</sup>
- 한편 IMF와의 협정과는 별도로 국제수지 개선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
- 1976년부터 M1의 증가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공표

○ 그러나 본격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1979년 M2(총통화)를 중심통화지표로 하는 통화량목표제가 도입된 이후이며, 이 시스템은 외환위기 전후 그 유효성이 크게 떨어질 때까지 지속됨

- 1979~1990년 중반 M2를 중심통화 지표로 정하여 통화량 목표제를 유지
- 1970년대 후반 M1의 움직임이 매우 불규칙하여 실적치와 목표치간의 괴리가 커지자 1979년부터는 중심통화지표를 M2로 변경

6) 금융상품별 유동성 정도에 따라 통화(M1; 요구불예금), 총통화(M2; M1+ 저축성예금), MCT(M2+ CD, 금전신탁), 총유동성(M3; MCT+ 비통화금융기관예수금, 금융채, 환매채, 상업어음매출, 표지어음매출)로 구분. '01년6월말 현재 총유동성(M3; 100%) 가운데 MCT 53.8%, M2 45.2%, M1 4.9%, 현금 1.6%의 비중(한국은행(2001), p.43).

7) 당시 정부기업이었던 한국비료를 지칭함.

8) IMF와의 통화지표 구체적 목표치 협의 결정은 대기성차관은 1980년대 후반 국제수지 흑자에 힘입어 대기성차관을 모두 갚을 때까지 지속.

- 경제성장률 목표, 물가상승률 그리고 통화유통속도 변화 등 예상되는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M2 공급목표(증가율)를 결정
- 그러나 1996년 4월 신탁제도 개편 이후 급증한 저축성예금으로 M2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목표범위를 크게 상승하자 중심통화지표의 다양화를 시도
  - 1996년 4월 높은 증가세를 보여 오던 일반불특정신탁 취급 금지로 인하여 금전신탁에 이탈된 자금이 저축성예금으로 유입
  - 1997년부터 M2와 MCT(M2+양도성예금증서(CD)+금전신탁) 두 지표를 목표로 하는 복수통화시스템을 도입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물가안정목표제도로 이행하기 전 IMF의 대기성차관 도입에 따른 정책협의 과정에서 과도기적 통화량목표제를 채택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심화되면서 현행 금융기관 중심의 통화지표 편제의 수정 필요성이 증대
  - 당시 가장 광의의 지표인 M3(총유동성)의 적정증가율에 상응하는 본원통화 공급한도를 예시한도로 설정하여 관리

<표 2> 우리나라 통화정책 운영의 역사적 변화 추이

통화량 목표제			물가안정목표제	
'79~'96	'97	'98~'99.4	'99.5~'08.2	'08.3~현재
중심통화지표: M2	M2, MCT	M3의 적정증가율에 상응하는 본원통화한도 명시	중심물가: 소비자물가('00~'06년은 근원인플레이션을 중심물가로 사용)	
운용목표: 지준총액			운용목표: 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어 지속되고 있음

- 1997년 말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물가안정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하면서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
  - 설립목적을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서 '물가안정'으로 변경하고, 통화정책 운용목표로 콜금리를 설정, M3 목표증가율을 감시지표로 활용<sup>9)</sup>

9) 2008년 3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되면서 운용목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됨.

- 대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와 협의 하여 물가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 중심물가는 소비자물가(CPI)이지만, 2000~2006년 동안에는 근원물가(core inflation)가 사용<sup>10)</sup>
- 2000년부터는 정책 시차문제에 따른 단년제 물가안정목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연간 물가목표와 더불어 향후 3년의 중기목표를 함께 제시
- 2010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1%이며, 동 목표의 적용기간은 향후 3년(2010~2012)간임

## □ 정책에 대한 평가

○ 1990년대 중반까지 운용된 '통화량 목표제'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서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았으며,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이 미흡

- 1979년부터 1999년 초까지 운용된 바 있는 '통화량 목표제'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오일쇼크 등 해외요인으로 인해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겪음
- 1980년대 초반에는 2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80년대 후반에는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겪음
- 1991년 이후에는 경제가 안정된 모습을 보임에 따라 M2 통화증가율은 대체적으로 목표치 근처에 머물렀음
-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목표제 하에서 고금리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조절적인 역할이 미흡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현 상황을 제외하고, 1970년 이래 우리나라는 모두 2차례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분기 기준)을 기록<sup>11)</sup>

10)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곡물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프로판가스 및 도시가스)를 제외한 물가지수로서 자연재해나 원유가 급등과 같은 일시적·단기적 충격요인에 의한 영향이 제외된 물가지수임.

11) 1980년 2/4분기와 4/4분기에 처음으로 각각 1.3%(전년동기대비)와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5.3%(1/4분기), -7.9%(2/4분기), -8.1%(3/4분기), -6.0%(4/4분기)].

<표 3> 우리나라의 M2 증가율 목표치 對 실적치

(%)

연도	목표치	실적치	산정기준
1979	25	24.6	연말 기준
80	20 (25)	27.0	"
81	25	25.2	"
82	20 ~ 22 (25)	27.0	"
83	18 ~ 20 (15)	14.7	12월 평잔 기준
84	11 ~ 13	8.9	"
85	9.5	13.9	"
86	12 ~ 14 (16 ~ 18)	17.4	"
87	15 ~ 18	22.5	"
88	15 ~ 18	18.8	연 평잔 기준
89	15 ~ 18	18.4	"
90	15 ~ 19	21.2	"
91	17 ~ 19	18.3	12월 평잔 기준
92	18.5	18.6	"
93	13 ~ 17	17.3	"
94	14 ~ 17	17.6	"
95	12 ~ 16	13.7	"
1996	11.5 ~ 15.5	17.8	"

자료 :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p.68.

주 : '79년 이후 '96년까지 18개 연도 중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는 음영으로 표시한 5개 연도.

- 1980년 소비자물가는 28.7%(전년대비)로 1965년 통계치가 발표된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채 수익률이 20~30%까지 상승
- 외환위기 당시 환율을 안정시키고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처방으로 IMF가 고금리 정책을 권고함에 따라 초고금리정책을 유지[분기평균 콜금리: 25.3%(1/4분기), 23.4%(2/4분기), 22.5%(3/4분기), 21.3%(4/4분기)]

○ 1999년 5월 이후 운용 중인 '물가안정 목표제'가 안착되고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경기 및 금융시장 조절 역할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채택된 인플레이션 타기팅(물가안정 목표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목표범위를 유지함으로써 외형상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1999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제의 비교적 무난한 실적에는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국내수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환율하락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sup>12)</sup>

12) 함준호(2008),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p.63.

<표 4> 물가안정 목표제 시행 이후 물가 목표치·실제치 비교

연도	기준물가	목표치	실제치
1998년	소비자물가	9±1%	7.8%
1999년	소비자물가	3±1%	0.8%
2000년	근원물가	2.5±1%	1.8%
2001년	근원물가	3±1%	3.6%
2002년	근원물가	3±1%	3.0%
2003년	근원물가	3±1%	3.1%
2004~06년	근원물가	3.0±0.5%	2.3%
2007~09년	소비자물가	3.0±0.5%	3.3%
2010~12년	소비자물가	3.0±1%	

자료 : 한국은행.

- 물가안정 목표제 하에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리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금리의 시차효과를 고려한 대응이 다소 미흡했음
- 통화당국은 '콜금리인하 → 시장금리 인하 → 소비, 투자 증가 → 경기부양 과 금융시장 안정'의 금리중심 통화관리 메커니즘을 염두에 두고, 특히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콜금리를 인하<sup>13)</sup>
-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국내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2003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25%까지 낮췄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어짐<sup>14)</sup>
-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 이후에야 시장 안정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2.75%p 인상
- 한편, 금통위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 사상 유례없는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sup>15)</sup>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13)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

14) 민간소비가 2003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금리정책이 반경기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2002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하했어야 함. 실제 금리 인하는 '03년 5월부터 시작되어 1년 정도 늦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의 시기도 너무 늦어진 것으로 판단.

15)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에 기준금리를 5%에서 2%로 급격히 인하했음.

## 2-2. 人的 구성<sup>16)</sup>의 변화와 성과

○ (위원의 전문성) 최규하 정부 이후 정치인과 군인의 임명이 전혀 없으며, 전두환 정부 이후 대학교수와 금융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원의 전문성<sup>17)</sup>은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경력별 구성을 보면, 금통위 초기에는 금융인들이 다수를 점했으며, 전두환 정부 이후에는 대학교수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다시 금융인이 다수를 차지함

<표 5> 역대 정부별 금통위원의 경력

직업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합계
관료	5	2	14	0	4	5	5	7	2	44
금융인	20	6	27	1	4	5	3	4	5	75
교수	2	4	7	1	15	6	8	6	2	51
기업인	4	2	10	1	1	0	0	0	0	18
정치인	2	1	1	0	0	0	0	0	0	4
군인	0	1	2	0	0	0	0	0	0	3
합계	33	16	61	3	24	16	16	17	9	195

주 : 1~2 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 5인 제외.

- 위 표에 따르면 최근 기업인 출신 금통위원이 거의 없어서,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권이 부활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도 기업인 보다는 교수를 추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위원의 대표성) 기업인과 민간 금융인의 추천이 대폭 축소되어, 금융 소비자의 이해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함

16) 이승만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명된 200명의 금통위원을 대상으로 인적 구성을 분석함.

17) 전문성을 측정할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긴 곤란하지만, 한국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인, 금융을 전공한 대학교수, 금융정책 관련 관료의 경우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하며, 전문성을 나타내는 간접 지표로서 '경력'을 활용함.

- 아래 표에 따르면, 대한상의 추천위원의 경우, '62년까지는 기업인들이 주로 참여하다 '98년 이후에는 주로 교수 출신이 참여하고 있음. 은행연합회 추천위원의 경우, '98년 이후부터 관료 출신이 전체 4명 중 3명을 차지

<표 6> 대한상공회의소 및 금융기관 추천 금통위원의 1998년 前後 경력 변화 (단위: 명)

추천기관	시기 구분	금융인	교수	관료	기업인	기타	합계
대한상의	'50~'62년*	1	0	0	5	0	6
	'98~'07년	0	3	1	0	0	4
	전 체	1	3	1	5	0	10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50~'97년	25	10	3	1	1	40
	'98~'07년	1	0	3	0	0	4
	전 체	26	10	6	1	1	44

주 :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은 '62년 5월 1차 한은법 개정으로 없어졌다가, '98년 다시 부활됨

○ (재임기간 늘어남) 잦은 정변과 제도변화<sup>18)</sup>로 평균 재임기간이 28.4개월<sup>19)</sup>에 불과하지만, 1997년 말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평균 재임기간<sup>20)</sup>이 뚜렷이 길어지고 있음

- 역대 정부별로 재임기간을 보면,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군사 정변으로 재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재임기간도 각각 7.5개월, 14.3개월로 가장 짧았음
- 금통위원들이 상근하게 되고 임기도 4년으로 늘어난 김대중 정부<sup>21)</sup> 이후 다시 재임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41.8개월로 가장 길었음

18)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쿠데타, 1979년 10.26사태, 12.12쿠데타 등 정변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명이 거둬졌으며, 아울러 1997년 말의 제6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해 다수의 위원들이 불가피하게 퇴진하는 등 다양한 외부요인들이 평균 재임기간 단축에 영향을 미침

19) 1-2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에 임명된 5명(평균 재임기간 6.8개월)을 제외한 195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표 5>에서와 같이 29.0개월로 늘어난다.

20) 출신지별 재임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 24.2개월(34명), 경기 35개월(12명), 충청 26개월(24명), 호남 46.8개월(16명), 영남 27.3개월(63명), 강원 22개월(6명), 제주 32개월(2명), 황해도 등 이북지역 24개월(17명)로 나타나, 호남지역 출신의 재임기간이 46.8개월로 가장 길었음

21) 제6차 한은법 개정으로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금통위원들의 재임기간이 31.7개월에 불과한 이유는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이 특정 대통령 임기에 모두 교체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당시 새로 임명되는 금통위원 3인의 임기를 당시에 한해 2년으로 했기 때문이며, 제6차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원에서 물러난 당시 이규성 재무부장관의 재임기간이 1개월에 못 미쳤기 때문

<표 7> 재임기간(1): 역대 정부별 금통위원의 평균 재임기간

(단위: 개월, 인)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체
24.8 (33)	7.5 (16)	33.1 (61)	14.3 (3)	33.7 (24)	36.1 (16)	20.8 (16)	31.7 (17)	41.8 (9)	29.0 (195)

주 1: ( ) 안은 관측치(금통위원)의 數이며, 노무현 정부는 2010년4월에 모두 퇴임한 9인까지 포함.  
2: 1-2공화국 사이에 임명된 5명을 포함한 200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28.4개월

- 금통위원 추천기관<sup>22)</sup>에 따라서도 평균 재임기간이 달라지는데, 중앙은행의 경우 32.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정부 추천은 27.7개월로 짧았는데 이는 ‘재무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영향을 미쳤으며, 금융기관 추천 위원들의 경우 설립 초기에 임기가 1년이었던 것이 평균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쳤음

<표 8> 재임기간(2): 추천기관에 따른 금통위원의 평균 재임기간

(단위: 개월, 인)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전체
27.7 (111)	32.6 (27)	27.7 (47)	28.6 (10)	29.0 (195)

주 : ( ) 안은 관측치(금통위원)의 數이며, 1-2공화국 사이의 공백기 5인 제외. 2010년 4월말 기준.

- 금통위원의 상근 여부에 따라서, 또는 경력과 학력에 따라서도 재임기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금통위원이 상근을 시작하게 된 1998년 이후 임명된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36.6개월이며, 그 이전 비상근 위원들의 평균 재임기간 27.2개월에 비해 9.4개월 이상 길어졌음

22) 정부 추천에는 과거 재무부장관(당연직)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금감위원장 추천이 포함되며, 금융기관 추천에는 과거 민간금융기관 선출, 증권업협회 추천, 은행연합회 추천이 포함됨

<표 9> 위원의 상근 여부 및 이력의 차이에 따른 평균 재임기간

(단위: 개월, 인)

	상근 여부 (+)	관료 경력 (-)	금융기관 경력 (-)	중앙은행 경력 (+)	교수 경력 (+)	대졸 여부 (-)	박사 여부 (+)	서구유학 여부 (+)
그렇다/ 있다	36.6 (25)	21.1 (92)	27.3 (88)	30.1 (62)	36.0 (54)	26.7 (126)	33.1 (45)	32 (66)
아니다 /없다	27.2 (175)	34.6 (108)	29.2 (112)	27.6 (138)	25.5 (146)	30.9 (73)	26.8 (154)	26.4 (133)

주 1: +와 - 기호는 영향의 방향. ( )안의 숫자는 금통위원 數

2: 전체 200명 대상. 2010년 4월말 기준. 학력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 1개 존재

- 관료 경력을 가진 위원들의 재임기간은 21.1개월로 상당히 짧은데 비해, 중앙은행 경력의 위원들은 30.1개월, 교수 경력을 지닌 위원들은 36.0개월로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임기만료 비율 증가)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46%에 불과했으나, 금통위원이 전원 상근하게 된 '98년 이후 임기만료 비율이 점차 높아져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의 임기만료 비율은 89%에 달함

-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승만 52%, 윤보선 19%, 박정희 46%, 전두환 46%, 최규하 0%, 노태우 69%, 김영삼 13%, 김대중 65%, 노무현 89%로서, 제6차 헌법 개정으로 위원들이 상근하게 되면서 임기만료 비율이 크게 높아짐

<표 10> 역대 정부별 금통위원의 퇴임사유

퇴임사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합계
임기만료	17	3	28	0	11	11	2	11	8	88
승진사임	1	1	8	1	1	0	0	3	1	16
경질사임	8	2	7	1	4	2	6	0	0	30
자의사임	2	0	12	1	6	2	0	0	0	23
불만표시	0	1	1	0	0	0	1	1	0	4
정권교체	5	3	5	0	2	1	2	0	0	18
제도변화	0	6	0	0	0	0	5	2	0	13
합계	33	16	61	3	24	16	16	17	9	195

주: 1-2공화국 사이의 정권 공백기에 임명된 5인 제외. 2010년4월 기준

- 따라서, 중앙은행과 관련된 제도 및 정치체제의 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의 안정적 운용과 금통위의 중립성 제고에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3. 향후 60년을 위한 과제

○ (정책목표의 탄력적 운용)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

-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를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부동산시장 포함) 안정도 고려하여 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짐
  - 통화정책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위험지수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물가안정 목표의 대상기간을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통화정책 의결기구가 최종목표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중립성을 제고할 필요
  - 대외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의 과민 반응과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이 임명한 금통위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절차를 도입하는 2단계 시스템 운영

- 금통위원의 임명을 대통령(행정부)이 완료하는 현재의 1단계 시스템을 행정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2단계 시스템, 이중견제시스템(double veto procedure)<sup>23)</sup>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표 11>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통위원 임명권자 및 절차 (2008.11월말)

중앙은행	통화정책기구		임명권자 및 절차
미국 FRB	연준이사회	이사(7)	대통령 임명, 상원 인준 (인준과정에서 청문회 거침)
유럽 ECB	정책위원회	이사(4)	유럽의회 · ECB정책위원회 협의 후 각료이사회 추천, 회원국 정상 선임
영국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외부위원(4)	하원 재무위 인사청문, 재무장관 임명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6)	양원 사전 동의, 내각 임명

자료: 한국은행

23) BIS(2009), p.12

- 미국 FRB<sup>24)</sup> 의장과 이사들은 상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영국은 9명 중 4명이 하원 청문회를 거친 비상근 위원, 일본은 참의원·중의원 동의 얻어야
-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을 의결하는 금통위의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검증과정이 추가된 이중견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임기 연장) 정책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더 길게 연장하는 것을 검토함

- 우리나라 금통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의 3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은 4년으로서 47개국 중 가장 짧은 3개국<sup>25)</sup>에 속하며, 대통령이 재임하는 5년 동안에 7명의 위원이 모두 교체됨. 금통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더 길게 연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 미국 14년, 독일 8년, 유럽중앙은행 8년, 프랑스 6년, 일본 5년, 영국 3년

<표12> 주요국 금통위원 임기 및 연임 여부 <표13> 세계 47개국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

국 가	임 기	연임 여부						
미 국	위원 5인: 14년	연임 금지	3-4년	5-6년	7-8년	정하지 않음	종신	합계
영 국	위원 6인: 3년	연임 가능						
일 본	심의위원 6인: 5년	연임 가능	6%	64%	17%	13%	0	100%
독 일	이사: 8년	연임 가능						
프랑스	위원 4인: 6년	연임 금지						
유럽중앙은행	이사: 8년	연임 금지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BIS(2009). 주: 47개국을 100으로 한 비율.

24) 우리나라 금통위는 195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문가 2명을 파견 받아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FRB와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FRB와 우리나라 금통위의 제도는 유사하지만 위원들의 임면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운영 행태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 금통위는 지난 60년 역사 동안 46명의 위원장과 204명의 위원을 배출했고,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위원장 14개월, 위원 28개월에 그치는 불안한 제도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FRB는 1914년 이래로 96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FRB 의장은 통산 14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6년 이상이었으며, 짧게는 14개월에서 길게는 20년 가까이 재임한 경우도 있었다. FRB 이사의 경우에도, 1914년에서 1989년까지 75년 동안에 모두 68명이 재임하였으며, 특히 M. S. Szymezak의 경우에는 1933년부터 61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근무하였다. 1935년 미국 은행법 개정으로, 재무부 장관과 통화감독관은 FRB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며, 7명의 이사 전원을 상원의 인준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고, 임기는 14년으로 정해졌다. 미국 대통령의 최대 재임기간인 8년보다 4년 더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 BIS(2009)의 47개국 금통위원 임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이 4년 이하, 30개국이 5~6년, 8개국이 7~8년, 6개국이 9년 이상(특정하지 않음)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47개국 중앙은행 총재의 평균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선진국은 5.2년이었고, 개발도상국은 4.8년이였다.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금통위원장의 평균임기는 15개월(1.3년)에 불과했다.

- (임기 교차배열) 특정 대통령 재임기간에 모든 금통위원이 교체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짝수 해 또는 홀수 해에 1명씩 교체되도록 임기를 교차배열(staggering of terms)하는 방식을 도입
  - 금통위원을 2년마다, 즉 짝수 또는 홀수 해에 1명씩 교체하도록 임기를 교차배열하고, 교체 인원이 한 해에 최대 2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면, 한 명의 대통령이 최소 7명에서 최대 11명까지 교체<sup>26)</sup>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최소 4명에서 최대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됨
    - 현재 금통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당연직)만 3년이고 나머지 6명은 4년이지만, 짝수 해에 3명씩 바꾸도록 했고 한은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므로, 4년 안에 7명 모두가 교체됨
    - 미국 FRB이사의 경우, 임기는 14년이며 2년에 1명씩 교체되도록 교차배열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음
  
- (민간 전문가 추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금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 금융 소비자의 시각을 반영함
  -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도 은행연합회 추천과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이 제도의 취지<sup>27)</sup>와 달리 관료 및 교수 출신 인사로 추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대표(CEO) 추천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비상근 4명의 위원을 민간 금융전문가로 임명

연 구 위 원 김동열 (2072-6213, dykim@hri.co.kr)  
 전문연구위원 박덕배 (2072-6216, dbpark@hri.co.kr)

26)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모두 7명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금통위원을 모두 11명 임명하고, 다음 대통령은 7명, 그 다음 대통령은 11명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금통위원의 임기 교차배열(staggering of terms)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7) 1950년 5월의 창업 선언문에 따르면, “衆議制의 구현과 금융체계의 民主的 改編”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다.

<별첨 1> 기록으로 본 금통위원

기록	이름	나이	재임기간	주요 경력	추천기관
초대 금통위원장	최순주	48세	50.06-51.03	연희전문 상과 교수, 조선은행 총재	재무부장관(당연직)
초대 한은 총재	구용서	51세	50.06-51.12	조선은행 총재, 한은 총재, 석탄공사 총재, 산은 총재, 상공부 장관	한은 총재(당연직)
최연소	오정근	36세	65.05-66.03	해병대 대장,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심사위원장, 공화당 정책위원장 (수자원공사 사장, 수산청장, 국세청장)	경제기획원
최고령	윤호병	74세	65.05-68.05	조흥/흥업/서울은행장, 재무부장관	금융기관
최다선 (4회)	김세련	45세	62.06-63.02	한일은행 회장, 산업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한은 총재, 국회의원, 필리핀 대사	재무부장관(당연직) 한은 총재(당연직) 경제기획원 상공부
		46세	63.12-67.12		
		50세	67.12-69.12		
		62세	79.03-81.06		
	윤호병	62세	53.06-54.06	조흥은행장, 흥업은행장, 서울은행장, 재무부장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재무부장관(당연직) 금융기관
		64세	55.06-56.06		
69세		60.04-60.08			
74세		65.05-68.05			
이정환	42세	61.06-61.07	연세대 교수, 재무부장관 고문, 한은 부총재, 농협 회장,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산업은행 총재	금융기관 한은 총재(당연직) 재무부장관(당연직) 금융기관	
	44세	63.06-63.12			
	45세	64.06-64.12			
	49세	68.12-75.05			
최장수 (17년2개월; 206개월)	홍성하	52세	50.06-55.06 (60개월)	보성전문대 교수, 제헌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한국은행법 통과 당시 위원장)	기획처 경제위 농림부
		66세	64.03-76.05 (146개월)		
최단명 (12일)	이정환	42세	61.6.25-61.7.6	연세대 교수, 재무부장관 고문 (한은 수석부총재 영전 후 사임)	금융기관
전직 대통령	윤보선	53세	50.06-52.06	서울시장, 상공부장관	농림부
최초 여성	이성남	59세	04.04-08.04	시티은행, 금감원 부원장보, 국민은행 감사	금감위
군인 출신	백선진	39세	61.05-61.06	육본 병참감, 국방부 차관보, 육본 군수참모부장	재무부장관(당연직)
	오정근	36세	65.05-66.03	해병대 대장,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심사위원장, 공화당 정책위원장	경제기획원
	정인환	48세	71.02-75.06	포병학교장,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사단장	상공부
3代 은행가	민병도	46세	62.05-63.06	조흥은행 전무, 제일은행장 [祖父 민영환: 조선한일은행 설립, 父 민대식: 동일(조흥 전신)銀 설립]	한은 총재(당연직)

주 : 이승만 대통령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명된 200명 대상.

<별첨 2> 임명 횟수별 금통위원

4회	3회	2회	1회
김세련, 윤호병, 이정환	구용서, 나웅배, 박재운, 서봉균, 이규성, 홍승희	강경식, 김건, 김만제, 김유택, 김현철, 이경식, 박승, 박동규, 백두진, 서재식, 성창환, 신판국, 이성태, 이승윤, 이정재, 전철환, 정종원, 홍성하, 홍재형, 황종을	최순주 외 170명
3명	6명	20명	171명

주 : 이승만 대통령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명된 200명 대상.

<별첨 3> 72개월(6년) 이상 재임한 금통위원 (11명)

이름	나이	재임기간 (개월)	주요 경력	추천기관
홍성하	66세	64.03-76.05 (146)	보성전문대 교수, 제헌 국회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한국은행법 통과 당시 위원장)	농림부
박숙희	58세	67.05-79.05 (144)	한국은행 부총재, 농업은행 총재, 한국비료 사장, 한국전력 감사	농림부
성창환	57세	74.05-83.05 (108)	부산대 교수, 고려대 상대 학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고문	경제기획원
김성환	55세	70.05-78.05 (96)	조흥은행 이사, 한국은행 이사, 은행감독원장	한은 총재(당연직)
김만제	41세	75.05-83.01 (92)	서강대 교수, KDI원장	금융기관
김익현	52세	84.01-90.11 (82)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상공부
이정환	49세	68.12-75.05 (77)	연세대 교수, 한은 부총재, 농협 회장,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산업은행 총재	금융기관
이규성	52세	91.02-97.02 (72)	재무부 차관보, 전매청장, 총리 행정조정실장, 재무부장관	상공부
전철환	45세	83.07-89.07 (72)	경제기획원/교통부 근무,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기획원
윤승두	58세	81.07-87.07 (72)	한일은행장, 신탁은행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상공부
추인석	61세	90.8.1-96.7.31 (72)	한국은행 이사, 동아투금 사장	상공부

주 : 이승만 대통령이후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명된 200명 대상.

<별첨 4> 금통위원을 역임한 대표적 은행가(Banker)\* 10인

이름	나이	금통위 재임기간	주요 경력	추천기관
구용서	51세 54세 55세	50.06-51.12 53.06-54.05 54.06-58.09	조선은행 입행(1925), 조선은행 부총재(45), 조선은행 총재(50), 한국은행 초대 총재(50), 대한석탄공사 총재(53), 한국산업은행 총재(54), 상공부 장관(58)	한은 총재(당연직)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윤호병	62세 64세 69세 74세	53.06-54.06 55.06-56.06 60.04-60.08 65.05-68.05	조흥은행장, 흥업은행장, 서울은행장, 재무부장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재무부장관(당연직) 금융기관
김진형	51세	56.12-60.05	식산은행 이사, 조선은행 이사 한은 부총재, 금융조합연합회장 농업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한은 총재(당연직)
민병도	46세	62.05-63.06	조흥은행 전무, 상업은행 전무,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한국은행 총재, 제일은행장	한은 총재(당연직)
김세련	45세 46세 50세 62세	62.06-63.02 63.12-67.12 67.12-69.12 79.03-81.06	한일은행 회장, 산업은행 총재, 재무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국회의원, 필리핀 대사	재무부장관(당연직) 한은 총재(당연직) 경제기획원 상공부
서진수	53세	67.12-70.05	조흥은행 전무, 산업은행 총재, 기업은행장, 상업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한은 총재(당연직)
전신용	60세	79.02-81.01	한일은행 전무, 서울은행장, 상업은행장, 한일은행장, 신탁은행장	상공부
김준성	60세	80.07-82.01	대구은행장, 제일은행장, 외환은행장, 산업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한은 총재(당연직)
하영기	57세	82.01-83.10	한국은행 이사, 한은 부총재, 제일은행장, 산업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	한은 총재(당연직)
이석주	61세	88.04-91.02	신탁은행장, 한일은행장, 제일은행장	농림부

주 : 1. 금통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분 가운데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행장을 3회 이상 역임한 은행가(3명) 또는 시중은행 행장과 한국은행 총재를 동시에 역임한 은행가(7명) 10인을 선정.  
2. 구용서 총재의 경우, 조선은행이 상업은행으로서의 기능도 겸했기 때문에 포함시킴

< 참고 문헌 >

- 김경수(2008), 「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건국 60년 기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한국은행
- 김재중(1987),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김진호(1995),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관행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김창규(1989), 「韓銀獨立性 保障을 위한 制度改善案의 比較評價」,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김태은(2002), 「한국·미국의 중앙은행제도 비교 분석 :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 고려대 행정대학원
- 내외홍보사(1949), 「대한민국인사록」  
「동아일보」 인물정보 <http://www.inmul.donga.com>
- 민병익·이시원(2007), 정부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4권제2호: 13-36
- 박대식(2007), 제도적 대통령에 관한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67-87, 한국행정학회
- 박신창(1988), 「中央銀行의 獨立性과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개편에 관한 研究」, 석사 논문, 서울大 行政大學院
- 박진수·강득록(2003), 第7次 韓國銀行法 改正의 主要 內容과 意義, 「조사통계월보」, 제57권 통권 제661호:47-67, 한국은행
- 송영대(1965), 「獨立規制委員會로서의 金融通貨委員會」, 석사 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 여강출판사(1987), 「한국 근현대사 인명록」
- 이방식(2006), 한국은행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제도의 개선방향, 「産經論叢」. 제26권2호:91-110, 전주대학교산업경영융합연구소
- 정운찬(1997), 中央銀行制度 改編에 관하여, 「韓國行政研究」, 6(2):113-130, 韓國行政研究院
- 진영택(1990),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獨立性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 서울시立大 大學院

- 조용탁(2006), 한은 독립운동사 : 권력에 짓밟힌 치욕의 역사...이젠 자울에 대한 책임 필  
요할 때, 「이코노미스트」, 통권852호:14-27,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6.08.29
- 조흥은행(1957), 『조흥은행50년지』  
「중앙일보」 인물정보 <http://www.people.joins.com>
- 차성웅(1987), 「우리나라 獨立規制委員會에 관한 研究: 金融通貨運營委員會와 勞動委員  
會를 中心으로」, 석사 논문, 延世大 行政大學院
- 한국은행(2000), 『한국은행50년사』
- 한국은행(2001),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 한국은행(번역), 「미국연방준비제도 75년사」 (Carl H. Moore 著)
- 한국학술진흥재단(1988), 「학술연구자 인명록」
- 함준호(2008), 「외환위기 이후 통화 및 환율정책의 평가 및 전망」, 『한국의 외환위기 10  
년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BIS(2009), "Issues in the Governance of Central Banks", 2009
- Cohen, Jeffrey E.(1986), "On the Tenure of Appointive Political Executiv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3), pp.507-516.
- Kyungsoo Kim and Jaewoo Lee(2010), "Monetary Policy of The Bank of Korea  
During the First Sixty Years", BOK
- Lastra, Rosa M. (1996), *Central Banking and Banking Regulat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London
- Lewis, David E. (2003), *Presidents and the Politics of Agency Design*, Stanford  
University Press
- (2008), *The Politics of Presidential Appointments: political control and  
bureaucratic perform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009), "Revisiting the Administrative Presidency: Policy, Patronage, and  
Administrative Competence",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9(1)

<부표>주요국내외경제지표추이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미국	0.4	-2.7	-5.4	-2.4	-6.4	-0.7	2.2	5.6	3.1	3.2
유로 지역	0.6	-0.4	-1.9	-4.1	-2.5	-0.1	0.4	0.1	1.0	-
일본	-1.2	-4.9	-10.3	-5.2	-13.7	6.0	-0.6	3.8	1.9	-
중국	9.6	9.0	6.8	8.7	6.2	7.9	9.1	10.7	10.0	11.9
한국	2.3	3.1	-3.4	0.2	-4.3	-2.2	1.0	6.0	4.5	7.8

주 :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5월28일	6월2일	전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29	3.34	0.05p
	엔/달러	90.76	96.65	92.93	91.03	92.22	1.19¥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2284	1.2242	-0.0042\$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0,137	10,250	113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763	9,603	-16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61	3.57	-0.04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94.9	1,216.5	21.6p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622.8	1,630.4	7.6

주 : 6월 2일 국내지표는 전일(6월 1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5월28일	6월2일	전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4.18	73.51	-0.67\$
	Dubai	36.45	71.85	78.06	-	71.85	-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54.80	252.94	-1.8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